

李, G20·믹타 이어 독·프 회담… “포용성·다자주의 회복”

G20서 격차 완화·포용성 성장 제시
믹타와 다자주의 복원 공감대 형성

마크롱과 한불 140주년 공조 논의
메르츠와 독일 통일 경험 공유 요청
전방위 정상외교로 협력 확대 모색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이집트를 방문한 데 이어 전날(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므키타(MIKTA) 정상·대표들과 격차·불평등 완화 등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루이스 아나시우 톨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는 등 정상외교도 펼쳤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에서 열린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담 1·2 세션에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과 ‘회복력 있는 세계’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제1세션에서 “지금 전 세계가 저성장, 불균형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대로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면 이웃은 물론 우리들 각자의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제 체질의 근본적 변화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 ▲개발도상국 성장을 위해 개발 협력의 효과 강화를 통해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국 모임인 므키타 정상·대표들과 만나 다자주의 회복과 실질적 국제협력의 중

요성을 강조했다. 므키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5개국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동에서 므키타 정상들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의 회복과 실질적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므키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평가하고, 그 역할이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내년에 한국-프랑스 수교 140년인데, 아주 특별한 해이기도 하니까 대통령께서 이번 9월에 방한하려다가 못 하셨는데, 내년에는 꼭 방한하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국민으로 아주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내년에 방한하는 것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다”며 “물론 수교 기념도 있지만 저희는 논의할 다양한 의제

들이 있다. 저희는 안보, 쿼텟, AI, 우주, 원자력 발전,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의에서 독일의 통일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독일과 대한민국은, 사실 독일이 먼저 간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의 경험으로 배울 게 많이 있다”며 “어떻게 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서 경험으로 배워서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 혹시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숨겨놓은 노하우 있으면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비밀 노하우는 없다”며 웃음 지었다.

다음날인 23일, 이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는 조선·방산·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고 톨라 브라질 대통령과는 양국 간 외교, 재무, 산업, 기술, 교육, 에너지 등 범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기업인 등 민간 부문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도시철도 적자 절반이 무임손실!

부산교통공사 최근 5년(‘20~’24년)
연평균 무임수송 손실은 당기순손실의 약 54%

10.27. ————— 11.26.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국회 국민 동의청원

1분이면 됩니다



국가가 책임질 때
초고령화시대 계속가능
교통복지가 완성됩니다

부산교통공사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예결위 예산안 막판 심사 돌입 ‘배당 분리과세’ 조세소위 논의

여야, 지역상품권·농어촌 이권
소소위 가동하며 막판 조율 돌입
취약계층·성장펀드 등 공방 지속
배당 분리과세는 시기 조정 쟁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원회를 열고 막판 조율에 나선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8.1% 오른 총 728조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본 예산안인 만큼 큰 수정 없이 예산안을 사수하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농어촌기본소득, 국민성장펀드 등을 이재명표 예산안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예산’으로 규정하고 적극 삭감에 나섰다.

국회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예산안 등 조정소위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원)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예결위는 예산소위 내 소위(소소위)를 가동하고 그간 여야 입장이 첨예했던 쟁점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선다. 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국민성장펀드 등 100여건의 사업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소위는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여당 간사, 박형수 예결위 야당 간사,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 등 소수인 원만 참가한다. 소소위는 매년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 때마다 가동돼 왔는데, 회의

속기록도 남기지 않아서 ‘밀실 심사’, ‘쪽지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보은’과 ‘편가르기’를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한 예산 심의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망 확충을 ‘보은 예산’이라 부르는 국민의힘의 인식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퇴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산업재해 예방 강화, 지역 생태·환경예산 증액은 미래세대를 위한 기본 과제”라며 “이를 ‘편 가르기’라고 부르는 것은 특정 지역과 계층을 향한 국민의힘의 오래된 정치습관을 반영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면서 정권 코드에 맞는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청년의 삶을 위한 예산은 줄이고, 자신들의 코드 예산만 대폭 늘리고 있다”며 “무주택 청년과 서민의 주거 기반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을 정부안에서만 3조7000억원을 감액해놓고도 보완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반면, 정권 코드에 맞춘 예산은 예외 없이 대폭 증액됐다. 향소포기 증가에 따른 국가배상금 확대, 민주노총 등 특정 단체 지원, 4대강 보 해체 대비 재자연화 예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추가 증액 등은 필요보다 ‘코드’가 앞선 대표적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